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한 동 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8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미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조문정국과 권력승계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김정은 체제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의견상으로 안정된 승계과정을 완성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초점은 김정은 체제의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의 문제로 국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접근이 북한체제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북한 인권문제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와 인권문제

혹자는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김정은의 해외 유학 경험을 연결시키곤 한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김정은은 개혁·개방, 민주주의, 인권 등 서구적 가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는 그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유일 계승자로 내정되었던 김정은은 12월의 조문정국을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올해 4월

11일의 제4차 당대표자회와 이어진 13일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등, 북한체제의 실질적 최고권위자로서의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김정일 사망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올해 1월 1일의 신년공동사설도 “김정일 유훈통치와 김정은 영도체제의 개막”으로 요약되며, 내용의 순서상 당에 앞서 군에 대한 강조를, ‘인민생활향상’에 앞서 체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정치사상적’ 결속이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 체제는 정권의 결속 및 내부적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며,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 못지않은 강도 높은 민감성을 표출해왔다.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정치적 변환의 과정에 있는 북한체제를 유지·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통제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기도 할 것이다. 이미 김정은이 후계지명을 받고 후계자 수업을 하던 시점이었던 2011년 2월 평양에서는 ‘선군청년 총동원대회’라는 청년 집회가 열렸으며, 김정은 당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 대회에서 청년들이 단결하여 “이색적인 현상들을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제거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로 보건대, 향후 지속될 김정은 체제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여 북한체제 쇄신을 도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자원과 역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제한된 자원을 내부체제 공고화를 위한 국가기능 강화, 사회통제 강화, 외화 벌이 사업에 전폭적으로 할애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명권, 자유권, 식량권, 건강권 등 북한인권의 전반적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체제 하 북한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통한 민심 이반 방지라는 목표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국제사회는 김정은 체제 하 북한인권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엔 차원, 지역 차원, 개별국가 차원의 통합적 방식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18일 나비 필레이(Navanethem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 개회연설에서 인접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권이사회 개회연설을 통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르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올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주변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 문제제기는 향후 강화될 추세이며, 유엔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구체적 언급만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3월의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가 무투표 합의로 통과되었는 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된다.

유럽에서의 국제인권 논의동향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6월 25일 유럽연합은 모든 대외정책에 인권을 연계하는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또한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 현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36개 분야에서 96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EU Special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를 임명하고, 유럽과 대외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에 민주화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유럽민주주의기금(European Endowment for Democracy) 설립을 계획하였다.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회원국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는 5월 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의 회 관계자들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과 유럽 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진 6월 중순에는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2회 샐시오 인권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협력방안,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 상원 외교위는 6월 19일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가결하여, 탈북자 재정착 지원 및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전략은 단기간에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 운동 주체들이 실질적 목표를 향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의 좋은 예이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강화는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의 하나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당국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유엔의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을 고발하고, 그 반인도성에 주목하는 논의에서부터 유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활발하다. 밖으로부터의 변화의 물결은 서서히 북한을 향해 흐르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과 김정은 체제의 미래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단순히 악화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 외에 체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만, 북한 체제의 미래와 북한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많지 않다. 북한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일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양쪽의 주민들이 하나로 만나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논의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며,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주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김정은 체제의 성공 여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대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의 승계과정에서 표출된 강력한 사회통제 및 체제유지 공고화 목표는 승계과정의 공식적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민의 자유권도 개선되지 못한 채 퇴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또한 근래 지속되었던 가뭄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식량권을 비롯한 경제적 권리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사망을 전후하여 14개 경제법령을 정비하여 외자유치 확대를 의도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의 성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0년 말부터 2011년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스민 혁명은 변화를 거부하는 독재체제에 대한 시민적 저항운동을 보여준다. 물론, 여러 정황상 북한이 제2의 튀니지, 제2의 이집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북한정권의 향방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김정은 체제도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전 세계 민주화, 인권,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움직임 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북한지도부가 인권문제와 체제유지의 상관성을 더욱 자각하도록 돕는 데 있다. 즉, 주민들의 의식이 개방화될수록 북한을 그동안 지탱해 왔던 통제기반 정책은 그 효용성을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주민들의 인권개선이 김정은 체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목표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개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표준에 따른 인권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김정은 제1비서가 4·15 열병식에서 육성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인민생활향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국 국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